우암학원 창학 75주년
WCC 세계적인 전문대학 선정!!
전남과학대학교
CHUNNAM TECHNO UNIVERSITY

光州日報
SINCE 1952

아름다운 금융, 다채로운 금융, 함께하는 금융
평생어부바
광주문화신협
대표번호 1644-7990
본점·여신사업부·문흥지점·양산지점·운암지점·매곡지점·첨단지점·동림지점·동광주지점·각화지점

1952년 4월 20일 창간 제22542호 1판 대표전화 (062)222-8111 kwangju.co.kr 음력 6월 29일 2025년 7월 23일 수요일

막무가LH

광주 미분양 아파트 넘쳐나는데 산정지구 1만4000세대 개발 강행

정부 'LH 대개조' 예고 속
지역사회 강력 반발에도
국공유지 조사·설명회 열어

이재명 정부가 '말 많고 탈 많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대개조를 예고한 가운데 LH가 광주시와 지역사회의 거센 반대 여론을 무시하고 1만4000여 세대 규모의 산정지구 개발을 강행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역 내에선 새 정부의 LH 구조 개혁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선 윤석열 전 정부에서 밀어붙였던 대규모 아파트 개발 사업을 중단하고, 광주 발전에 필요한 공익개발 사업 등에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2일 광주시와 LH 광주전남지역본부 등에 따르면 LH는 광주시 광산구 산정동과 장수동 일대 51만평(168만㎡) 부지에 아파트 1만 4036세대를 조성하는 사업을 진행 중이다. 사업 기간은 2023년부터 2033년까지이며, 2023년 7월 지구지정 고시 이후 빠른 속도로 건립 절차를 밟아나가고 있다. LH는 지난 1월 1차 주민 설명회를 열었으며 오는 8월 말 2차 설명회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광주시와 지역 시민사회단체에선 사업 초기부터 지역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대규모 주택 개발 사업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LH의 '택지 조성 후 민간 매각' 구조 방식을 지적하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까지 이 대통령의 지시 사항에 대해 'LH 개혁'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LH의 산정지구 사업 강행은 새 정부의 정책 기조와도 동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새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LH의 구조조정, 비효율 개선, 지역균형개발 재정비 등을 핵심으로 한 '대개조' 방안을 내세우고, 전국적으로 LH 사업 전반을 다시 살피겠다는 방침을 밝힌 상태다.

하지만 LH의 산정지구 개발 사업은 되레 사업 규모와 추진 속도 면에서 기존 관행을 반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새 정부의 정책 기조에 역행하는 이중적 행보라는 비판까지 쏟아지고 있다.

현재 산정지구 사업은 지역 사회에 거센 반발에도 국공유지에 대한 기본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사유지와 지장물 등에 대한 조사는 2차 주민 설명회 이후 착수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광주지역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광주 인구 정체 상황과 기존 주택시장 수급·미분양 현황, 교통 인프라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새 정부의 LH 혁신 기조에 부합하려면 산정지구 사업 역시 당장 중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광주시도 지역 내에 쌓여가고 있는 미분양 아파트 상황 등을 우려해 산정지구 개발 사업을 반대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광주지역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는 지난 5월 기준 419호로 전월(349호) 대비 20.1%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부터 광주지역 부동산 경기가 침체하면서, 악성 미분양 아파트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해부터 강기정 시장이 직접 나서 국토부와 LH 등에 반대 의견을 수차례 전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국토부가 사업 승인권자이자 지정권자고, LH가 사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광주시에는 어떠한 권한도 없다"면서 "기존에 이미 건설된 아파트의 미분양 물량이 많은 상황에서, 1만 세대가 넘는 대규모 아파트까지 추가된다면 지역 주택시장의 대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더위탈출 대서인 22일 광주에 폭염경보가 발효된 가운데, 광주 서구 치평동 평화공원 인공폭포에서 쏟아지는 물줄기가 도심의 열기를 식히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전남·전북 각각 10억원 재난 특별교부금

정부, 특교세 지원
담양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괴물 폭우'로 큰 피해가 발생한 담양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됐다. 〈관련기사 7면〉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2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담양, 경기 가평, 충남 서산·예산, 경남 산청·합천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고 밝혔다. 광주시와 나머지 전남 지역은 추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광주시에 따르면 전날 행정안전부는 광주·전남에 각 10억원씩의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각 10억원씩을 지원했다.

특교세는 피해지역의 이재민 구호·피해시설 응급복구·2차 피해 방지 등을 위한 긴급 안전조치에 사용된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오는 30일까지 수해로 인한 자연재난 피해 신고를 받고 있다. 이 신고를 토대로 정부는 재난 발생 30일 이내에 특별재난지역을 선정한다는 것이 광주시의 설명이다.

자연재난지원금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해 지급된다. 해당 규정에 따라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재난 발생 10일 이내에 사유재산 피해 내역을 접수해야 한다.

신청은 수해 발생 주소지의 읍·면·동의 행정복지 센터 등을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가족이나 이장·통장, 이웃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시·도는 작성된 신고서를 토대로 피해 내역을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입력하고 이후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가 현장 실사를 거쳐 피해액을 확정한다. 주요 생계수단이 농업이나 어업, 임업일 경우 관련 피해를 신고할 수 있다.

광주시는 집중호우로 피해 시민들이 불편 없이 피해신고와 각종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호우피해자 통합지원센터'(센터)를 시청 1층에 설치해 운영중이다.

센터는 피해 수습 종료 때까지 운영된다. 센터에서 시민들의 재난지원금 신청 누락을 방지하고, 상·하수도 요금 감면, 세금 납부 유예, 입대일자 연기 등 각종 지원제도도 안내 받을 수 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피해 지역민이 지원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할 방침"이라면서 "복구 작업과 재난지원금 신청 절차를 서두르는 등 행정력을 총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전남, 치매관리주치의사업 '그림의 떡' ▶6면
김도영 복귀 준비…KIA 완전체 속도 낸다 ▶18면
인생을 즐기는 자들의 '아모르 파티' ▶22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李 "재난에 음주가무 정신 나간 공직자 엄히 단속"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국민이 죽어가는 엄혹한 현장에서 음주가무를 즐기거나 대책 없이 행동하는 정신 나간 공직자들에 대해 아주 엄히 단속하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공직사회는 신상필벌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강조한다"며 "열심히 근무하는 공무원도 많다. 우수사례를 최대한 발굴해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 발언은 백경현 구리시장 등이 야유회를 열고 노래와 춤을 즐겼다는 언론 보도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다행히 비는 그쳤지만 망연자실하게 무너진 집과 떠나간 가족을 생각하며 아무 표정도 짓지 못하던 분들, 발만 동동 구르던 분들이 눈에 계속 밟힌다"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어떤 일인지 잘 생각해야 한다. 국정을 책임진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고통에 더 예민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특별재난지역 선정도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고, 특별교부세 지급도 최대한 빨리 집행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폭우를 보며 기존 방식의 대책엔 한계가 있다고 생각했다. 근본 대책을 국무총리가 강구해달라"며 "인공지능 기술 등을 포함해 자연재해 종합 대응 시스템을 새로 구축해야 하고, 교량이나 댐 등 인프라 정비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